

높아진 美 관세장벽에... 14억 中 시장으로 눈 돌리는 K-식품

삼양식품·대상 등 전량수출 의존 관세부과 현실화면 수익성에 타격

中 통화정책 완화, 한한령 해제 예고 식료품·생필품 기업들 수혜 전망 삼양식품 중국 법인, 2027년 완공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이를 기회 삼아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예외주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식품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한국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매출 비중이 큰 식품기업들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 1위 국가다. 지난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15억 887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라면이며 각종 음료와 베이커리 제품, 김치 등도 뒤를 이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판매가를 올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



챗GPT가 생성한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 이미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판매가를 동결하게 되면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삼양식품의 경우 라면 제품을 현지 공장이 아닌 전량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썸범이 복잡하다. 대상 증가도 김치 수출 주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포함 국가나 품목, 시기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지 생산 라인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과

가 현실화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푸드, 美→中 무게 중심 이동

국내 식품업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해외 시장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인구 14억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2022년 21억9703만 달러 ▲2023년 20억4615만 달러 ▲2024년(11월까지) 18

억6334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부터 중국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실시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생활 필수재 부문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오리온은 올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 제품 위주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식 트렌드에 맞춰 식물성 육포와 오트키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중국 내 영업체제를 '간접 영업체제'로 전환해 영도가 넓은 중국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삼양식품도 중국 시장을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 매출 중 중국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삼양식품 싱가포르 유한회사(가칭)를 설립하고 647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오는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중국 자싱시에 생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장은 중국 내수 전담 생산기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올해 중국 시장 내 냉동 제

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박람회 등을 통해 중국 내륙 지역 소비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빙그레 전체 매출에서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은 2.8%다. 다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규모는 109억원으로 1년 새 25.3% 성장했다.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

이르면 5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식품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한령은 2017년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도입된 이후 8년간 유지됐다. 이로 인해 롯데월드푸드는 상하이와 베이징 공장을 매각해야 했고, CJ제일제당·풀무원·오리온·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K-푸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과거에도 해제 가능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한령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K-푸드의 인지도를 활용한 현지화 전략을 펼쳐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1면 '주춤서 미래 준비하는...서 계속

임단협 갈등 최고조... 현대제철 '부분 직장폐쇄'

노조 게릴라 파업에 사측서 중단 이달 냉연 생산손실 254억 추정 美 25% 관세폭탄 등 리스크 겹쳐

현대제철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사태까지 겹치며 내외의 환의 이종고에 빠졌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외부 위협 요인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요 수요일업의 침체와 노조리스크까지 다중으로 겹치며 충격이 더해진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4일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설비 일부(PL/TCM)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현대제철 노조가 과도한 성

급 요구와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자 결국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제철소 설비 일부의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피해금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설비는 냉연강관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강관의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전 압연을 하는 장비다. 냉연생산 라인의 선공정으로, 이 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현대제철은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직장 부분 폐쇄를 선택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과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진행됐다.

지난 1일~22일까지의 노사분규로

냉연 부문에서 발생한 생산 손실은 27만톤으로 추정된다.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의 글로벌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 현대제철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보복관세와 중국의 과잉철강 덩핑 수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세계 철강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집안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임단협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교섭을 마무리짓기 위해 경영 성과금과 독려금,

생활안정 지원금과 더불어 기본급 400%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안을 지급할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해 650억원 적자로 수정 공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금 지급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 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외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가계대출 등 지방으로 자금공급"

>> 1면 '불공정거래 적발...서 계속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높고,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문제는 금융을 풀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면역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달라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DSR 규제를 어렵게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할 경우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는 아

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비중을 지방에 더 쏠리게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며 "어차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MG손보 매각, 협상 늦어져선 안돼'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 협의는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

보험을 매각할 최종 우선 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했고 이에 노조는 반발한 상황이다. 매각이 불발돼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하면 약 124만명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전자

'안정 속 혁신'에 초점 강성춘 사외이사 내정

이 본부장은 전략분야 전문가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 및 중점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연구원장은 철강연구 전문성과 AI를 활용한 공정 자동화 등 폭넓은 신기술 연구 경험을 토대로 그룹 기술 개발 체계 고도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안정 속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전자는 내달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LG전자는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강성춘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에 내정했다. 강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 미국 코넬대 인적자원관리 박사를 나왔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위원,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번 주총에서 현재 사내이사 세명 중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된 ㈜LG 부회장인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인 류충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각각 이사로 재선임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톱(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